



국제 농업 정보 : 일본

1 2022년 일본 식품 트렌드 전망¹⁾

■ 코로나19 장기화로 2021년도는 외출 자제 및 재택근무로 인한 활동량 저하로 건강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팬데믹 속에서 소비자들은 건강식에 집중, 이에 트렌더스주식회사²⁾는 2022년 식품 트렌드 전망을 키워드별로 소개함.

| 2022년 식품 트렌드 전망 |

<p>① (식재료) 식물성 유제품 대체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는 식물성 우유(소의 젖이 아닌, 귀리나 아몬드 콩 등 식물로 만든 우유)가 일본 시장에서 주목받아, 기업들은 식물성 버터(식물의 씨나 열매에서 짜낸 기름을 이용하여 만든 버터)나 식물성 생크림(팜유, 아자유 등의 식물로 만든) 등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 • 이것들은 건강 지향이나 환경을 배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대응 식품으로서도 기대가 높아 식물 베이스 상품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
<p>② (식재료) 배양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콩 미트볼이나 식물성 참치(오메가3 지방산이 높은 유채오일과 완두콩, 밀, 천연향료로 만든 것) 등 대체식품이 일본에서 확대되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배양육은 2021년에는 일본에서도 배양육을 실용화시키기 위해 메이커들이 주력하는 것과 동시에, 유명 셰프들과 팀을 구성하여 배양육을 개발하는 등 움직임이 본격화 • 환경문제, 식량문제의 큰 수단으로써 2022년에는 전환점이 되는 움직임을 세계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p>③ (메뉴) 이탈리아 디저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블 시대에 한 세기를 풍미한 이탈리아 티라미수, 2021년 일본에서 히트한 '마리토조※'에 이어 딱딱함이 특징인 이탈리아 푸딩이나 티라미수 등 이탈리아 디저트가 재조명 ※ 마리토조 : 브리오슈(밀가루·버터·달걀·이스트·설탕 등을 넣은) 반죽에 생크림을 넣은 빵 • 또한, 일본인들에게 친숙하고 준비하기 쉬운 메뉴가 많아 업계는 2022년에 재유행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전망
<p>④ (메뉴) 저칼로리 푸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년 전에 잠깐 화제가 되었던 저칼로리 푸드는 큰 인기를 끌지 못했으나 최근 저칼로리 디저트를 포함해 인기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얼리어답터들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어 SNS를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는 모습 • 식재를 가열하지 않고 선명한 색조를 낼 수 있는 채소를 중심으로 화려하면서(사진 찍기 좋은) 칼로리가 낮아, 건강지향 베이스인 것이 특징이라 다이어트 식품으로 여성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

1) 농식품신유통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본 - 키워드별 2022년 식품 트렌드 전망"(869호, 2021.12.24.)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함(<https://news.yahoo.co.jp/articles/c46a79bada2718555431eb8a106a58aa57998d22?page=2>).
 2) 트렌더스주식회사는 마케팅, 미디어 홍보사업을 하는 기업이며, 연매출 약 3억 4,000만 원, 직원 수 약 150명의 규모임.



국제 농업 정보 : 일본

<p>⑤ (판매 방식) 업사이클 푸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되어야 할 식재료를 활용해 새로운 식품을 만들어내는 업사이클 푸드는 여러 기업들에 의해 규격 외 채소나 쓰고 남은 채소 등을 활용한 상품이 차례차례 등장, 한 가지 예로, '팜캐닝(FARM CANNING)³⁾'은 규격 외의 채소를 생산자로부터 매입하고, 이를 가공하여 병에 담은 상품을 판매 • 또한,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규격 외 채소를 식품뿐만 아니라, 폐기 식재료를 활용한 물티슈 등의 아이템도 등장하여 폐기 식재료에 새로운 형태의 상품들은 가속해질 것으로 전망
<p>⑥ (판매 방식) 계량 판매 식품 등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소비자들은 비닐봉지 유료화 등 음식 소비에 있어 플라스틱 쓰레기류의 삭감에 대한 의식이 고조, 이에 업체들은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상품에 포장 용기를 없애고 계량 판매하는 상품을 늘리고 있어, 트렌더스주식회사는 환경 배려라는 큰 목적에 대해 모두가 환경 의식이 높아지는 움직임이 느껴진다고 분석

-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코로나 분위기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 소비자들은 여전히 건강을 생각한 상품에 관심이 고조, 설령 2022년에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도 소비자들의 불안함이 완벽하게 해소되기 전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하여 2022년에도 건강상품 개발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2.01.0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사람·농지 등 관련 정책 재검토 결과⁴⁾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1년 12월 24일, 2021년 5월에 공개한 사람·농지 등 관련 정책 재검토에 대해 정책 대응 방향을 추가 정리하여 발표하였음.
- 현재 고령화·인구감소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 감소 및 경작 포기지 확대가 가속화되어 지역 농지가 적절히 이용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음.
- 향후, 농업 성장산업화 및 소득 확대를 위해서는 생산 기반인 농지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람·농지 및 이와 관련된 정책을 검토해갈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농림수산성에서는 2020년 12월에 개정된 농림수산업·지역 활력 창조 플랜을 기반으로 △농업 경영 이행자 확보, △농지 적절한 이용 촉진, △농촌 소득 확보, △고용 기회 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기본방향에 대해 검토를 시행, 2021년 5월 사람·농지 등 관련 정책 재검토를 정리하였고, 이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를 추진하여 정책 대응 방향을 추가 발표함.

3) 팜캐닝(FARM CANNING)합동회사란 2016년에 설립된 업사이클 푸드 제조 및 판매회사를 말함.

4) 일본 농림수산성 “「人・農地など関連施策の見直し」について”(2021.12.24.)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https://www.maff.go.jp/j/press/keiei/zinzai/211224.html>).



국제 농업 정보 : 일본

| 사람·농지 등 관련 정책 재검토 |

사람·농지 등 관련 정책 재검토 (2021년 5월 25일 농림수산성 공표)	대응 방향
<p>◆ 사람·농지 플랜</p> <p>(1) 사람·농지 플랜은 하나의 규칙으로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써 법정화를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이해를 추진</p> <p>(2) 사람·농지 플랜에서 '농지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경영체 등(계속해서 농지를 이용하는 중소 규모의 경영체, 작업 및 농기계를 공동 이용하며 농업을 부업으로 삼는 반농반X 경영체 등)을 인정, 농업인과 함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이용을 지원</p> <p>(3) 사람·농지 플랜은 농업 현장에서 대응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면서 지역에서 각각의 상황을 바탕으로 농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활용할 것인지, 농업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여 농지 집약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이 목표로 해야 할 장래의 구체적인 농지 이용의 모습(목표 지도)을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농지 플랜을 시정촌이 책정하는 계획으로 법정화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촌은 기존 지역협의회(지역농업재생협의회 등)도 활용하면서 새롭게 협의의 장을 마련하여, 농업인·농업위원회·농지뱅크·농협·토지개량구 등과 함께 수요에 따른 생산 등 지역 농업의 미래 모습에 대해 논의 • 이를 바탕으로 시정촌은 지역 미래 농업의 방향성, 미래 농지의 효율적·종합적 이용 목표(목표 지도 포함) 등을 포함한 사람·농지 플랜을 책정 • 사람·농지 플랜은 지역의 농업·농지 이용 마스터 플랜이 되며, 책정 및 책정 이후 시정촌이 농업위원회, 농지뱅크, 농협, 토지개량구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농업인을 시작으로 지역 주민까지 충분한 이해를 도모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촌은 사람·농지 플랜 가운데 마을 농지의 '목표 지도'를 작성(주지·작성 기간은 약 3년) • 목표 지도는 10년 후, 목표해야 할 농지의 효율적·종합적 이용 모습을 명확히 하는 지도로서 농지 집약화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농지의 집약화에 중점을 두고 생산의 효율화 등을 위한 이용 관계(농작업 수위탁 포함) 재구축을 통해 목표로 구체적인 농지 효율적·종합적 이용 모습을 나타낸 것(각 농지에 대하여 인정농업자, 다양한 경영체, 서비스사업체 등의 이용자 명확화) • 목표 지도가 원활하게 작성되도록 취약 커뮤니케이션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매년 기반 정비사업·지역집적협력금 등의 예산을 지원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위원회는 지역 내 농지의 출처·대여자 등 정보를 수집하고 농지뱅크 등의 관련 기관과 팀이 되어 '목표 지도' 틀을 작성하여 시정촌이 최종적으로 결정 • 국가에서 목표 지도 작성 진행 상황이나 선진적인 작성 사례 등을 공유하고, 각 기초자치단체 목표 지도 작성을 촉진
<p>◆ 농지 뱅크 등</p> <p>(1) 농지뱅크, 도도부현, 농업위원회, 시정촌 등 관계 기관의 활동에 대해서</p> <p>① 사람·농지 플랜의 '목표 지도' 실현을 위해</p> <p>② 농지뱅크를 축으로 농업위원회가 현장에서 수집한 농지정보 등을 바탕으로 각각의 명확한 역할 분담하에</p> <p>③ 공통의 구체적 방침에 따라 같은 팀이 되어 관계 기관 측에서 활동 등을 시행하여 체계적으로 대처 등을 진행</p> <p>위와 같은 능동적 접근으로 전환</p> <p>(2) 농지 처치를 촉진하는 루트는 농지뱅크를 경유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하는 등, 지역 농지에 대하여 '목표 지도'의 실현을 위한 대처를 농작업 수위탁을 포함하여 강력하게 촉진하는 조치 강구</p> <p>- 이 경우 농지뱅크에 의한 대처 운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관계 기관은 지역의 공통 목표인 '목표 지도' 실현을 위해 하나의 팀이 되어 현장에 대한 활동 등 추진 필요, 특히 농업위원회가 완수하는 역할이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지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망에 따른 상대적 대처로는 어려우며, 지역 전체에서 농지의 이용관계를 재구축하는 방법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



국제 농업 정보 : 일본

<p>사람·농지 등 관련 정책 재검토 (2021년 5월 25일 농림수산성 공표)</p>	<p>대응 방향</p>
<p>(3) 지역 내외에서 농지 대차 후보를 폭넓게 찾아 조정할 수 있는 구조 및 도시지역 등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인계한 농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구조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뱅크를 경유하는 방법은 분산된 농지를 일괄 임차하여 농가 부담 제로의 기반 정비(적용사업 확충 예정) 등을 통해 단지화된 형태로 전대하여 집약화 실현이 가능하도록 지역집적협력금도 활용하고, 농지뱅크를 통한 전대(농작업 수위탁 포함)를 집중적으로 실시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의 효율적·종합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차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조치도 검토 • 또한, 농지뱅크가 '목표 지도' 내의 농지를 유휴 농지·소유자 불명 농지도 포함해 폭넓게 인수하도록 운용을 재검토 • 지역 안팎에서 대차 후보를 널리 찾고 조정할 수 있는 구조 등 정비
<p>◆ 인재 확보·육성</p> <p>(1) 시정촌이 사람·농지 플랜 책정에 주력하여 '목표 지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인재상을 확고하고, 지역 내외에서 널리 사람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 등을 토대로 도도부현이 중심이 되어 시정촌과 제휴, 농업에 관한 단체 등의 지원 하에 사람의 확보와 육성에 대한 방침 책정 실시</p> <p>(2) 신규 취농</p> <p>① 도도부현을 중심으로 시정촌 등과 연계하여 관련 기관의 지원 하에 신규 취농 확보·육성에 대해 방침을 책정하고, 농지의 취득, 기계·시설 도입이나 판로 확보 등 세심한 지원 시행</p> <p>② 청년 등의 농업에 유입과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 매력을 알리는 동시에 폭넓은 층의 의견을 듣는 기회 마련</p> <p>(3) 취락 영농은 법인화와 더불어 기계의 공동 이용 및 인재 확보로 이어지는 광역화, 경영 다각화와 고수익 작물의 도입 등 각각의 상황에 맞는 대응 촉진</p> <p>(4) 지역을 초월한 광역에서 인재 매칭이나 관계 기관에 의한 지원 등, 제3자 계승 등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조나 지원체제를 정비</p> <p>(5) 농업인에 의한 사업 전개 촉진</p> <p>① 농지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농지 이용과 광역적 활동·경영 다각화 등에 대해 자금 부분 등 지원</p> <p>② 지역에 기반을 갖고 정착한 농지 소유 적격법인이 지역의 신뢰를 얻으면서 실적을 올리고 농업의 성장산업화에 더욱 힘쓰려고 하는 경우, 농업관계자에 의한 농지 등과 관련한 결정권 확보나 농촌 현장의 우려 불식 조치를 마련한 후 출자에 의한 자금조달을 유연하게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 확보·육성에 대해서 도도부현이 지역의 대응이나 관련 기관을 포함한 체제 정비에 관한 방침을 책정하여 시행하는 동시에 이에 맞는 시정촌이나 농협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 추진 • 지역에서 인재 확보·육성 방침에 입각한, 신규 취농인 경영 개시시의 자금이나 농기계·시설 도입 등에 대한 지원, 관련 기관 등에 의한 연수를 위한 농장 정비, 농지 취득 및 기술·판로 확보 등 지원, 농업 매력 전달 등 지원 • 취락 영농 활성화를 위해 비전 구축, 인재 확보, 고수익 작물의 도입이나 가공·판매 실시, 농기계 공동 이용 등의 대책과 이러한 대응을 지원하는 도도부현, 시정촌, 관련기관 등 지원 • 도도부현이 취농 희망자에 대한 정보 제공, 취농 상담 등의 취농 지원, 원활한 경영 승계를 위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 지원 등의 경영 지원체제 정비 • '목표 지도'에서 각 농지에 대하여 인정농업인, 다양한 경영체, 서비스업체 등의 이용자를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가 목표 지도의 실현을 위해 생산 효율화 등을 추진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함(공고자금·농업근대화자금)과 동시에, 농업용 기계·시설 도입 지원 • 인정 농업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성 후순위 대출을 공고자금으로 조치 • 인정 농업인에 의한 농업용 시설 및 가공·판매시설의 정비에 대하여 농업경영개선계획의 인증과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원스톱화 • 농지 소유 적격법인의 출자에 의한 자금조달에 대해서는 2021년 6월의 각의 결정을 바탕으로 불안감 해소 조치 등 지속적으로 검토



국제 농업 정보 : 일본

사람·농지 등 관련 정책 재검토 (2021년 5월 25일 농림수산성 공표)	대응 방향
<p>◆ 지속적인 농지 이용을 뒷받침하는 대응 추진</p> <p>(1) 향후, 사람·농지 플랜의 '목표 지도' 실현을 위해 농업지원 서비스 사업체에 대해 플랜으로 규정 및 활동 활성화 도모</p> <p>(2) 농협의 농업수탁에 있어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조합원이나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며, 농업경영에 대응하기 쉽도록 하고, 복수의 농업 조합법인 간의 연계 증진</p> <p>(3) 산지간 연계 등을 통해 노동력 조정 촉진, 인재 획득 경쟁이 격심해지는 가운데 다른 산업 수준의 노동 환경 등을 조성하여 농업 종사자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일하기 좋은 노동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을 검토하는 장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지도에서 각 농지에 대하여 인정농업자, 다양한 경영체, 서비스 사업체 등 이용자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들이 목표 지도 실현을 위해 생산 효율화 등을 추진할 경우 제도자금 지원(공고자금·농업근대화자금)과 함께 필요한 농업용 기계·시설 도입 지원 • 농협이 목표 지도를 실현하기 위해 조합원 이외의 기대도 부응하는 농작업 수탁 촉진, 농업경영을 하기 쉽도록 조합원의 서면 등의 절차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 자회사 등 농업법인에 의한 복수 농업 조합법인 사업 운영 참여 촉진 • 성수기가 다른 산지간 조정을 통해 관련 기관 등의 노동력 확보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하기 좋은 노동 환경 조성 방향 등에 대한 검토회 발족
<p>◆ 소득과 고용 기회 확보</p> <p>(1) 중산간 지역 등 직접지불제도에 있어 제5기 대책(2020년도-)부터 도입한 '취락 전략'을 더욱 실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취락 기능 강화 등을 뒷받침하는 가산 조치 적극적인 활용 추진</p> <p>(2) 대규모 경영이 어려운 중산간 지역에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복합경영 등 다양한 농업경영과 관련된 정책 보완 도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산간 지역 등 직접지불제도에서 소규모 취락형 등을 포함한 지역 커뮤니티 전체적으로 취락기능을 유지·강화하는 방안에 가산 조치 등 활용 • 중산간 지역의 복합경영 추진을 위해 지역별 실천모델 등 우수사례 공유 추진
<p>(3) 농산어촌의 핵심 경영인으로서 농업 이외의 사업도 추진하는 농업인(반농반수) 등 다양한 형태로 농산어촌 관련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는</p> <p>① 농박(체류형 농촌관광), 농업과 복지 연계, 수렵육 활용을 비롯한 농산어촌의 모든 지역 자원을 최대치로 활용</p> <p>② 농업인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하나가 되어 대응</p> <p>③ '농촌 지역 조성 사업체(농촌 RMO)'에 의한 대응 등 지역 자원을 최대로 활용한 사업 추진을 통해 소득 확보 수단 다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6차 산업을 '농산어촌발 이노베이션'으로 발전</p> <p>(4) 농산어촌발 이노베이션의 핵심 경영인으로서 2020년부터 시작된 '특정 지역 조성 사업 협동조합'이나 '노동자 협동조합'을 활용한 인재 매칭 등 추진</p> <p>(5) 농산어촌발 이노베이션이나 지역 커뮤니티 형성의 장 등 농산어촌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의 정비 시행하는 경우, 농업 토지이용과 조화를 도모하면서 대응 절차 신속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자원을 최대로 활용한 '농산어촌발 이노베이션' 추진을 위해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품·서비스 개발 등 추진 및 전문가 파견 등 실시 • 농산어촌 지역에 다양한 인재 참여를 추진하기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번기 도우미 등 농산어촌에서 다양한 활동에 도시지역 등의 다양한 인재와 접할 기회 창출 ② 다양한 인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이 하나가 되어 농용지 보전 활동이나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과 함께 생활 지원 등 지역 커뮤니티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대응을 시행하는 농촌형 지역 운영 조직(농촌 RMO) 육성 추진 • '특정 지역 조성사업 협동조합'이나 '노동자 협동조합' 알리기 외에 농산어촌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도시지역 등의 다양한 인재가 접할 기회 창출 •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주 등 및 지역 간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농산어촌 활성화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 계획을 책정하고 농산어촌발 이노베이션 등 농산어촌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정비를 실시하는 경우, 농지전용절차 등 신속화 시스템 도입
<p>◆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확보</p> <p>(1) 중산간 지역 등을 중심으로</p> <p>① 농촌 취락의 지역 자원 보전관리·활용과 관련된 장래 방향성 및 대응에 대한 합의 형성과 이에 기초한 공동활동 추진</p> <p>② 복수의 농촌 취락 기능을 보완하는 농촌 RMO 육성 등, 지역 자원 최적 배분을 도모하면서 효율적으로 농촌 지역을 운영하기 위한 구조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산간 지역 등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촌형 지역 운영조직(농촌 RMO) 형성을 위한 계획 작성, 실증 등 지역 대응 지원 ② 농산어촌 활성화법에 있어 지역의 다양한 관계자가 연계하여 농용지 보전이나 생활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관계자로 구성된 단체가 J나 농업위원회, 토지개발구 등의 지역 관계자와



국제 농업 정보 : 일본

<p>사람·농지 등 관련 정책 재검토 (2021년 5월 25일 농림수산성 공표)</p>	<p>대응 방향</p>
<p>(2) 지역 조성 관련 인재·노하우에 관한 지원, 기존 취락 영농 조직의 농작업 공동화나 농지보전 등과 더불어 사업 다각화 지원</p> <p>(3) 국토교통성 등과 연계해 유역 치수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저수지 등의 호우 대책을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p> <p>(4) 총무성과 제휴하여 농촌 지역의 정보통신 환경 구축 관련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광섬유, 무선 기지국 등 정비 추진</p> <p>(5) 취락·지자체가 목표하는 농촌 장기계획에 따라 관련 부처와 제휴를 통해, 생활 인프라 외 지역외로 및 생활교통 등 네트워크에도 고려하여 '작은 거점'을 정비하는 동시에 역내에서 재화·서비스 순환 구조 구축</p>	<p>연계하여 활성화 계획 작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할 수 있는 구조나 농진 제외나 농지 전용, 농지 권리 이전과 관련된 절차 신속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조성 인재 연수 강화와 함께 취락 영농 조직이 농촌형 지역 운영조직(농촌 RMO)으로 발전하는 방안 등 촉진 유역 치수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용 저수지 등 효과적 활용과 논 댐에 대응하기 위한 합의 형성 등 지원 토지개발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 비용 부담 및 동의를 구하지 않고 농업용 저수지나 배수기장 등에 지진 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구조를 호우 대책에도 적용 농촌 지역의 정보통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관민이 제휴하여 노하우 공유 등을 도모하면서 각각의 현장 여건에 맞는 계획 설정 및 시설 정비 추진 농촌 지역에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정비하기 위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부처와 제휴를 통해 생활 인프라·생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농산어촌 활성화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커뮤니티 형성 기회 등 농산어촌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정비 등을 추진할 경우 농지전용절차 등 신속화 구조 도입
<p>◆ 농지 장기 이용</p> <p>(1) 임대자가 없는 농지는 식량 안정공급을 위한 농지 확보를 전제로 한 장기적인 관점을 바탕으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농업 및 방목, 야생동물 완충대 등 농지나 토양이 가진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관계자 협의를 통해 지역의 토지이용을 제안할 수 있는 구조 <p>③ 농지 규모화·단지화 가속화 및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에 이바지하는 농지·농업 수리시설 정비 등에 대한 농가 부담 경감을 포함한 지원 등 추진</p> <p>(2) 시설 정비를 시행하는 데 있어 권리관계를 충분히 조사·조정 및 재산관리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조방적 관리 등에 관한 지역 내의 협의를 거쳐 계획 책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자가 없는 농지에 대하여 지역 관계자의 논의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o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어촌 활성화법에서 농용지 보전을 도모하는 사업(방목 등 조방적 관리, 야생동물 완충대 정비, 임지화 등)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농림어업단체 등이 JA나 농업위원회, 토지개발구 등의 지역 관계자와 연계하여 활성화 계획 작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할 수 있는 구조나 농지전용절차 등의 신속화를 도모하는 구조 도입 이와 함께 지역 농업인 등의 의향을 바탕으로 시정촌에 의한 토지의 상세한 용도(유기농업, 방목 등) 지정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 도입 토지개발법에 있어서 농지뱅크가 일정 규모로 임차한 농지에 대해 도도부현이 농업인의 비용 부담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구획 정리를 시행할 수 있는 구조를 농업 수리시설 등 정비에도 적용 농경지 정비 계획은 농지의 조방적 관리 등에 관한 지역 내 논의를 바탕으로 책정하고, 권리관계 조사·조정 등 지원 확충
<p>◆ 농촌 지원 인재 육성</p> <p>(1) 2021년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단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서포터가 되는 '지역 조성 인재'를 양성하는 '농촌 프로듀서 양성 강좌'에서 수료생끼리 서로 지원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내실화 도모</p> <p>(2)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재 활용, 시정촌(기초자치단체) 범위를 뛰어넘는 중간 지원 조직 등 관련 부처와 제휴하여 지자체 등에 대한 광역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강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 프로듀서 양성 강좌' 수료생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한층 더 대응을 강화하여 전국에서 추진 자치단체 등을 광역적인 지원체제로 지원하기 위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농촌형 지역 운영조직(농촌RMO) 형성을 지원하는 체제 구축



국제 농업 정보 : 일본

사람·농지 등 관련 정책 재검토 (2021년 5월 25일 농림수산성 공표)	대응 방향
<p>(3) 소규모 기반 정비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시정촌 및 토지 개량 사업 단체 연합회가 지원하는 구조 등 구축</p> <p>(4) 관련 부처·기관 등의 지방 창생 정책과 연계를 도모하고 농업에 대한 관심층을 획득하기 위해</p> <p>① 농산물 구매, 농산어촌 여행, 유니버설 농원에서의 농사 체험 등을 통한 '농촌 팬' 만들기</p> <p>② 농촌과 다양한 관계성을 희망하는 인재를 모집하여 JA 그룹 등 과도 연계해 이러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 농촌과 연계하는 기능 구축</p> <p>③ 도시 농지·농업에 대한 도시주민 이해 양성 등 추진</p>	<p>② 광역자치단체 단계에서 전문가 파견 등을 하는 지원센터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개량법에서 토지개량구 등이 시행하는 방재·감재 대책과 소규모 기반 정비를 자금·실행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토지개량 사업단체연합회의 업무에 ① 방재·감재 대책 등에 대해서 차입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토지개량구 등에 교부 ② 소규모 기반 정비에 대해 토지개량구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공사 시행 추가 토지개량법에서 소규모 토지개량구가 취락과 공동으로 농업 수리 시설 관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인으로 조직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농업에 대한 관심층을 획득하기 위해 ① 농번기 도우미 등 농산어촌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도시지역 등의 다양한 인재가 접할 수 있는 기회 창출 시스템 구축 ② 다세대·다양한 사람들이 교류·참여하는 장인 '유니버설 농원' 도입 추진
<p>◆ 관련 부처 등과 연계한 구조 형성</p> <p>(1) 기존 정책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새로운 정책과제가 추출된 경우,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새로운 정책 검토</p> <p>(2)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농업인 등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 절차 서류 간소화, 디지털 기술 활용 등 도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 지역의 과제 해결에 있어 필요한 대응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정보 교환 추진하고 정책을 결집시켜 대응 농촌형 지역 운영조직(농촌 RMO) 형성 등에 관해서는 관련 부처와 제휴하여 효과적으로 추진 지방자치단체나 농림어업자 등 보조금 활용 시 등 행정 부담 감감을 도모하기 위해 사무절차 간소화, 전자 신청 등 추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2.01.03., 01.1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식품 제조업과 소매업자 간 적정 거래 추진 가이드라인⁵⁾

- 농림수산성은 2021년 12월 27일, 식품 제조업자와 소매업자 간 적절한 거래 추진을 목표로 한 '식품 제조업자·소매업자 간의 적정 거래 추진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식품 제조업자와 소매업자 간의 적정 거래 추진을 위해 지금까지 두부·유부 제조업, 우유·유제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각각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여, 거래 관행 개선 및 소매업을 대상으로 적정 거래가 확산됨.

5) 일본 농림수산성 “「食品製造業者・小売業者間における適正取引推進ガイドライン」の策定について”(2021.12.27.)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maff.go.jp/j/press/shokuhin/seisaku/211227.html>).



국제 농업 정보 : 일본

-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타 제조업계에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식품 제조업자와 납품처와의 거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한 결과, 두부·유부 제조업, 우유·유제품 제조업과 같은 거래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근거로 관계 업계 단체 협력하에, 식품 제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식품 제조업자·소매업자 간 적정 거래 추진 가이드라인’을 책정함.
- ‘식품 제조업자·소매업자 간 적정 거래 추진 가이드라인’은 식품 제조업자와 소매업 간 거래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하청법이나 독점금지법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거래상의 법령 위반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향후, 본 가이드라인을 보급해 나감과 동시에, 관계 업계 단체의 요청에 따라 설명을 추진할 예정임.

| ‘식품 제조업자·소매업자 간의 적정 거래 추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원재료 가격 등 상승 시 거래 가격 개정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	• 대폭적인 원자재 가격 폭등 시, 자료를 바탕으로 가격 인상을 요청했지만,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동결
	바람직한 거래 실례	• 원자재 가격 큰 변동 시 제품에 사용되는 원자재 비율 등을 근거로 한 협상 결과를 기반으로 가격 전가 인정* ※ 미리 산정 방법 등에 대해서도 합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짧은 납기 발주, 발주 취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	• PB상품 제조 시 리드타임(lead time)이 짧고 무리한 주문에 응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예측 생산에 의한 재고 발생
	바람직한 거래 실례	• 소매업자와 긴밀한 논의를 기반으로 리드타임이나 예측 수량 등 협의를 통한 생산량 조정에 의해 폐기처분 감소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가격 결정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	• 소매업자의 특별 판매 기간에 대응하여 평소보다 가격을 큰 폭으로 낮춰 책정하고, 특별 판매 기간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낮춰진 가격을 요구
	바람직한 거래 실례	• 원가, 물류비 등의 내역을 바탕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합의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정보 교환
손님을 끌기 위한 납품 가격 부당한 인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	• 소매업자 A가 납품 가격을 밑도는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 다른 소매업자 B에게 이를 빌미로 같은 분류의 상품 납품 가격 인하를 일방적으로 요구, 소매업자는 거절 불가
	바람직한 거래 실례	• 소매업자 A에 대해 항시적인 납품 단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임을 설명하고 개선 • 소매업자 B에 대해 소매업자 A에 의한 납품 단가 이하의 가격 판매 실태를 설명하고, 거래가격 유지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2.01.1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 농업 정보 : 일본

4 농업 지원 서비스 의향 조사 결과⁶⁾

- 농림수산성은 2021년 12월 23일, 농업 지원 서비스⁷⁾에 관한 의식·의향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 농림수산성은 기업 및 JA의 농업 대행, 스마트 농업 활용 지원사업과 같은 농업 지원 서비스에 대해 핵심 농업 경영인의 이용 현황을 처음으로 조사하였음.
- **[농업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외부 조직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용하고 있음’ 52.9%, ‘이용하고 있지 않음’이 46.7%로 조사됨.
- **[이용 중인 유상 서비스]** 유무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용 중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영농 지도(모내기 및 시비 관리 등 지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41.6%로 가장 높았으며, ‘농약 살포 및 추비 등 관리 업무 대행’ 39.6%, ‘수확 작업 및 선별 등 영농 행위 대리’ 37.1%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음.
- **[향후 서비스 이용 의향]** 현재 농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향후 서비스 이용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이용할 의향 있음’ 26.7%, ‘이용할 의향 없음’ 72.1%로 나타남.
-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현재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음’이 38.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서비스를 찾는 방법을 모름’ 25.5%, ‘원하는 서비스가 없음’ 13.8% 순으로 조사됨.
- **[서비스 이용 검토]** 앞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에게 서비스 이용을 검토해 본 적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이용을 검토한 적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1%, ‘이용을 검토한 적 없음’이 89.7%였음.
- **[서비스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 서비스 이용을 검토했던 적이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서비스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이용료가 비쌌’ 22.7%, ‘어떻게 서비스를 찾아내야 하는지 몰랐음’ 12.6%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음.

6) 일본 농림수산성 “令和3年度 食料・農林水産業・農山漁村に関する意識・意向調査 農業支援サービスに関する意識・意向調査結果”(2021.12.23.)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maff.go.jp/j/finding/mind/attach/pdf/index-70.pdf>, <https://www.agrinews.co.jp/news/index/50418>).

7) 농업인 등에게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드론 살포 등의 작업수탁과 데이터 분석, 농업기계 공유, 농업 현장 인재 공급 등을 말함. 농산물 유통·판매와 관련된 서비스(대리 판매 및 공동출하 등)는 포함하지 않음.



국제 농업 정보 : 일본

- **[향후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농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또는 향후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 향후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지(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포함) 조사한 결과, '영농 지도(모내기 및 시비 관리 등 지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43.1%로 가장 높았으며, '성수기 등에 임시적인 인력 서비스' 32.2%, '농약 살포 및 추비 등 관리 업무 대행' 31.4% 순으로 대답함.
- **[정보(데이터) 수집]** 영농 관련 정보(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활용하고 있음' 72.3%, '활용하고 있지 않음' 21.9%로 나타남.
- **[영농 관리 방법]** 평소에 영농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노트에 기록(영농 일지 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8.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엑셀, 워드 등을 이용한 자체 양식' 14.1%, '농협 등이 일괄 관리' 9.1% 순으로 응답함.
- **[향후 영농 관리 소프트웨어 활용 의향]** 개별 양식에 엑셀 및 워드나 노트(영농일지 등)에 영농 관리를 하는 사람에게 영농 관리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의향을 조사한 결과, '활용할 의향 있음' 35.3%, '활용할 의향 없음' 62.3%로 조사됨.
- **[영농 관리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 영농 관리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영농 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음(현재 방법으로 충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8%로 가장 높았으며,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음' 22.6%, '본인의 영농 관리에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모름' 1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2.01.2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